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4. 3. .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남북한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과거의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극복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전쟁으로 빚어진 단절과 격동의 역사속에서 희생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남북이산가족들의 아픔이 20세기 냉전의 잔재로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남북간에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의 상봉, 18,939명의 생사·주소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상호왕래 및 재결합 등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간에 흩어진 수백만 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 확인이 가장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며,

지난 1991년 2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 1998년 12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 및 2000년 6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 등 대한민국국회가 세차례에 걸쳐 채택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을 위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왕래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20세기 냉전시대의 희생양으로 초래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분단은 전 민족적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서로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정도임.

2003년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수는 122,855명이며 신청자 1인당 찾고자 하는 평균가족수가 4~5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 이들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한 이산가족 규모는 약 60만명 정도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나, 가족찾기를 포기한 이산가족의 경우 및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찾기 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됨.

남북당국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이 상봉하고 18,939명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이산가족문제해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가족상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다수 이산가족들에게는 가족의 생사확인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허탈감만 더해 주고 있음. 특히 가족의 생사확인 은 이산가족들의 가장 1차적인 염원으로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남북당국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 미흡 및 북한측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임.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의 경우에도 희망자에 비해 그 규모 및 횟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및 왕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비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남북당국이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확인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